

불법증차 적발된 화물차 577대 5개월 넘도록 여전히 운행하는 이유는

광산구청, 차주들 행정소송 두려워 '미적'

경찰이 연초 적발 감차 통보
구청 "선불리 행정처분 했다"
행정소송 제기 땀 패소 우려"
광주시 "구청 행정처분 없어
유가보조금 지급까지 지급"

불법으로 증차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비롯, 카고 트럭·덤프·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수백대가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가 하면,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가보조금까지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
단속 이후 이뤄져야 할 자치단체의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로, 경찰 수사로 드러난 불법 증차 화물차량인 줄 알면서도 '혈세를 퍼부어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신규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 화물차량에 대한 허가를 받

은 뒤 허위 서류 작성 및 위조 등의 방법으로 증차가 불가능한 일반 화물차 577대 등으로 변경해 등록한 혐의 등으로 구청 공무원 등 17명을 적발했다.
정부는 '화물 차량 과다 공급'을 이유로 지난 2004년 5t 이상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대형 화물 차량의 신규 공급을 금지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브로커들이 공무원과 결탁해 불법 화물 차량 증차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당시 불법 증차된 화물차 577대의 등록이 이뤄진 광산구청에 감차(혹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통보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 차량은 버젓이 도로를 달리며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월 지급되는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도 고스란히 받아 챙기고 있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뻥튀기된 불법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업계 안팎에서 기대됐던 포화 상태에 이른 화물 운송 시장의 문

제점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황이다. 경찰에 적발된 운송업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린 뒤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또다른 소송에 휘말릴 우려를 내세운 구청의 '미온적' 대처가 한몫을 했다.
당장, 정부는 대형 화물 차량에 대해 기름값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광산구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도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 불법 증차 차량인 줄 알고도 혈세로 유가 보조금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당시 광산구를 포함 장성군과 영암 등에서 불법 증차 차량 1158대가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자치단체도 비슷한 형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와관련, "불법 증차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지만 재판이 진행중이라 선불리 감차 명령 내지는 원상복구를 내릴 경우 행정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어 확정 판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 보조

금의 경우 추후 해당 업체나 화물차주에게 100% 환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애초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과 직무 유기가 범행을 키웠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아 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화물 운송 시장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증차 여부를 알지 못하고 운송업체와 계약한 화물차량 운송업자 등도 적지 않아 감차 명령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최근 불법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 트랙터 등을 허가받은 뒤 뇌물을 건넨 H운수 대표 최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H운수 상무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첫 재판 이후 더 분주해진 검찰

선장 등 4명 '부작위 살인 혐의' 입증 주력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피고인들이 법리 적용 및 법규 해석의 문제점을 따지며 살인 혐의 뿐 아니라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선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로 A4 용지 1만 페이지에 달하는, 1900개가 넘는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특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준석(68)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김영호(46) 2등 항해사, 박기호(53) 기관장 등 4명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대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목록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대

안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에는 4명,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5명의 공판 관여 검사를 선정,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현재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될 검찰 진용은 사건 주임 검사인 박재익 강력부장을 중심으로 강력부 김영오·조영성 검사, 특수부 김현우 검사 등으로 짜여졌다. 한 검사 2~4명씩 신문을 분담하게 되는 셈으로,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의 재판에도 관여하게 된다.
검찰은 아울러 조만간 시작되는 공판에 대비, 15명의 피고인에 대한 법정 신문사항 정리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이씨 등 피고인들에 대해 100여 문항의 신문사항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병언 검거 작전 軍 투입...밀항 감시 강화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밀항에 대비한 감시·경계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유병언 검거작전에 군 투입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군은 기존 경계 및 작전태세는 단호히 유지하는 가운데 밀항으로 의심되는 인원이나 선박에 대한 경계 및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만약 밀항 상황이 발생하면 검·경과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서해안선 경계를 맡은 육군 부대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 등에 밀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감시 강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작전태세는 변함이 없다"면서 "평상시 거동 수상하거나 밀입국 의심 선박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군에 유병언 밀항 감시 임무까지 맡기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날 임정혁 대령 차장검사 주재로 진행된 유관기관 회의에는 권오환 합참 작전부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으로 경찰 병력이 진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금수원 진입...핵심조력자 '두 엄마'는 오리무중

범인은닉도피·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신도 5명 체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에 11일 검찰과 경찰이 진입, 구원파 신도 5명을 체포했다.
검·경은 오전 8시13분 40여개 기동중대 4000여명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에 투입해 임모(62)·김모(67)·박모(43)·최모(44)씨 등 신도 4명을 범인은닉도피 혐의와 잇따라 검거했다.
이들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자 청해진해운 회장에 도주차량과 도주로를 확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김씨·박씨 등 3명은 수배 중이었고 최씨는 긴급체포됐다. 검·경은 또 금수원 압수색 현장 집행을 저지한 신도 이모(57)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도피를 총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두 엄마'가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수사사항 파악 등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치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검거를 금수원 진입의 1차 목표로 봤다. 두 엄마 외에 검찰이 체포명장을 발부받은 유 전 회장 도피의 핵심 조력자 5명도 역시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과 경찰력을 투입하기에 앞서 오전 7시55분 구원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체포명장 집행사실을 통보했다. 구원파 신도 100여명은 새벽부터 금수

원 정문앞에 모여 스크럼을 짰 채 '종교탄압 중단', '무죄추정 원칙 준수' 등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자 순순히 정문을 개방했다.
검·경은 대강당을 위주로 금수원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가는 한편 구원파 신도들과 수배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며 검거작전을 폈다. 대강당은 신도 5천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주말 성경집회가 열리는 곳이다.
이날 금수원 진입 및 수색에는 경기·서 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63개 중대와 정보형사 등 모두 6천여명이 투입됐고 탐지견 3마리도 동원됐다.
/연합뉴스

유병언 검거 위해 내일 임시 반상회 개최

안전행정부는 수배 중인 유병언의 조속한 검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반상회를 13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오후 시도 안전행정국장과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에서 유병언 검거를 지원하

기 위한 임시반상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주민들이 유병언을 쉽게 알아보고자 사진이 찍힌 수배전단을 포함한 반상회보를 특별 제작해 배포한다. /연합뉴스

"영업 방해된다" 철재 울타리 훼손한 식당·카페 주인 나란히 경찰서행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자신의 가게 앞에 설치된 철재 울타리를 훼손한 식당·카페 주인 2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11일 무안경찰청에 따르면 박모(48·무안군 삼향읍)씨와 김모(48·무안군 삼향읍)씨 등 2명은 지난달 23~29일 오후 3~6시 사이에 무안군 삼향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카페 앞에 설치된 철재 울타리를 2m 가량 훼손한 혐의.

○...이들은 경찰에서 “방호울타리가 가게 앞을 가로막아 차도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가게로 진입하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는 등 영업에 방해가 돼 울타리를 해체했다”고 진술. /무안=김민준기자 jun@

2015. 5월 예정 준공예정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나주혁신도시에 2014년 11월!

“근함”
거대 근함이 몰려온다

(한전,농어촌공사 등 17개기관)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중양호수공원

빛가람동 주민센터
국립전파 연구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시행:한빛가림(유) 책임시공사:건해종합건설(주) 신철사:아시아신력